

일본의 환동해 구상 및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 세 은

경희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교수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일본의 '환일본해' 구상과 전개 | 참고문헌 |
| III. 현대 일본의 환동해 연구의 실재 | Abstract |
| IV. 일본의 환동해 연구의 특성과 한계 | |

Key words(중심용어): 동해(East Sea), 일본해(Japan Sea), 환동해 지역(East-Sea Rim Region), 환동해 지역연구(East-Sea Rim Studies), 일본해학(Japan Seaology)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환동해 구상 및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환동해 지역이란 동해를 둘러싼 한반도·중국·일본·러시아의 이해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근대/탈근대, 냉전/탈냉전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역내 국가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정책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실재로서 장이다. 실질적인 협력이 존재하든 하지 않던, 경제적 차원·정책적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던지 간에 환동해 공간은 실재적인 장으로서 학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대상이다. 환동해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학문적 차원으로 전환될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의 환동해 지역연구 모색 과정에서 동 공간에 대해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환동해 구상 및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일본의 환동해 연구는 다양한 근대/탈근대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형성되고 있으며 실천을 지향하고 있는 실학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고 적응하여 구성되는 세계, 즉 환동해 지역의 실재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이 연구는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9-362-A00011).

I. 서론

2011년 8월,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동해¹⁾관련 기사가 환동해 지역의 현 상태와 한일관계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실태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다 입국이 저지됐고, 일본의 방위백서는 또 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올 3월에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일본은 4년마다 역사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해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교과서 검정을 발표할 때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해 한일관계를 냉각시키곤 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것으로 한미 동맹 외교와 정부의 정책이 비난 받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 되게 되었다.

동해는 물리적으로 대륙과 일본열도로 거의 단혀있는 연해이면서 대양의 순환적 특성을 지닌 소대양이다. 사회적으로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환동해 연안 지방은 후진성,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중심부와 동떨어져 있어 크게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종종 독도 문제나 동해표기만이 크게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동해관련 이슈는 전체 공간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지역적인 부분에 국한되곤 했다. 또한 연구 중심축이 동해의 자연환경과 경제개발 연구에 치중되면서 인문학적, 지역학적 연구와의 호응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동해에 관한 인문학적, 사회학적 연구가 주로 지도를 통한 동해문제의 해명 및 명칭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환동해 지역연구는 우리 사회 내에서 아직 소원한 실정이다.

환동해 지역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측면, 특히 지방 수준의 정책적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환동해권 경제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논의는 1990년 길림성 장춘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중국 측이 두만강 하구지대를 중국, 북한, 러시아 당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최승업 2002, 3). 이어 1991년 ‘두만강개발협정’의 체결,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의 자유무역경제지구’의 선포, 1992년 러시아의 ‘대블라디바스톡계획’의 발표 등으로 환동해권 역내 국가들의 지방개발 정책이 구체화되어 갔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 ‘러시아 교통전략 2020’,

1) 본고는 ‘일본해’라는 용어를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의 명칭 표기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다. 일본 중앙정부는 병기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수준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국제회의에서 명칭을 ‘동해/일본해’를 병기하거나 각국의 입장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해라는 명칭을 기반으로 하는 ‘환동해 지역’을 ‘동북아시아’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영문으로는 ‘일본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는 ‘Japan Sea’로 고수하지만, ‘Northeast Asia,’ ‘Northeast Pacific’이라는 별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논쟁은 학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에서 일본이 제창한 ‘일본해학’ 시리즈(전 8권)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출판하려했으나 ‘일본해’ 표기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본 측에서 번역서에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하거나 ‘일본해/동해’ 병기하는 방안 모두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 개발 연방특별 프로그램” 등의 발표로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과 환동해 지역을 연계하고 나아가 환동해 지역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동북 진흥 추진 종합계획’, ‘장지투(長吉圖, 장춘-지린-투먼)개발사업’ 등으로 동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²⁾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나진항 사용권 획득은 동해로의 진출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관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환동해권의 지방협력이 논의된 지 어언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오늘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은 미미하다. 10여 년 동안 다양한 회의에서 교류확대의 필요성 및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환동해 지역 협력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및 개발정책, 에너지, 환경, 물류, 교통과 같은 상호 호혜성 등 여러 측면에서 높은 교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산업기반,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규모, 취약한 교통접근성, 열악한 제도적 환경 등과 같은 제약요인으로, 세계적·동북아·한반도 수준의 정치·안보적 제약요인으로 실질적인 수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한반도 남북문제, 북한의 핵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또다시 국가적 차원의 지정학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관계는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0년 한반도에서 북핵문제, 천안함 사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동해의 상황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에서 환동해에 대한 연구는 지방수준에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종종 사회적·시대적 관심도에 종속되면서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환동해 지역 간 교류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동해 연안지역은 여전히 변방지역으로 인식되고, 지방개발 차원에서 주로 논의가 되면서 동해 연구는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다. 실질적인 협력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경제적·정책적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던지 간에 동해라는 공간은 실제적인 장으로서 학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대상이다. 환동해 관심이 이제 학문적 차원으로 전환될 시점에 이르렀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은 동해연구에 범국가적 예산을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93년 CREAMS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연과학은 물론 인문·사회연구를 종합한 동해연구를 개시했다. 이는 동해의 사회적 당위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어 일본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해학(Japan Seaology)’을 제창하면서 동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일본해학은 다방면의 근대/탈근대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발하여 현재 형성되고 있으며, 나아가 실천을 지향하는 실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환동해에 대한 학문적 수준의 연구, 나아가 종합적인 지역연구로서 환동해학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족주의적, 국가 전략적 목적을 넘어 종합학문으로서 환동해학을 체계화하는 도정에서 일본의 환동해 구상 및 대표적 연구인 ‘일본해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중국이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해 동북 지린(吉林)성에서 생산된 석탄을 중국 남방 지역으로 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이 북한의 나진항을 빌려 동북 지역의 천연자원을 중국 남방으로 실어 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선일보』, 2010. 1.4.) 참조.

II. 일본의 ‘환일본해’ 구상과 전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환동해 지역 협력 구상에 앞서 일본은 오랜 기간 정책적 측면에서 환동해 구상³⁾을 진행 해왔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이런 구상은 환동해 지역, 나아가 동북아의 지역 정체성⁴⁾을 크게 왜곡시켜 부정적 지역정체성(negative regional identity)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환동해 지역의 협력과 신뢰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 지역정체성(positive regional identity)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의 자기정체성은 자기조직적(self-organization)의 속성을 지니며 영토보전, 자율성 확보, 국가발전과 같은 기본 욕구를 발생시킨다. 국가들은 집합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타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볼 수 있다. 구성주의나 관계론적 패러다임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이익, 나아가 지역정체성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집합정체성인 지역정체성은 우호적이거나 협력적이거나 경쟁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환동해의 지역정체성 또한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본의 환동해 관련 구상을 이런 지역정체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1) 메이지 유신 이후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은 국가개발과 관련하여 환동해 지역을 인식하였다. 다른 국가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고, 타국을 정복하거나 파괴했던 이 시기에 환동해 지역에는 홉스적 문화(Hobbesian culture)가 지배하게 되고, 부정적 집합정체성(negative collective identity)이 형성되었다. 당시 중화세계 질서를 붕괴시키고 동북아시아에 패권을 차지하려는 일본의 이런 정책은 영토 확장주의, 개발지상주의의 성격을 짙게 띤다. 청일전쟁(1894~95), 러일전쟁(1904~05), 경술국치(1910), 만주국 건설(1932), 중일전쟁(1937~45)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대륙 침공루트로서 ‘동해’의 위치가 설정된다. 기본구상으로는 우선 ‘북조선 루트론’이 있고, 그 후 ‘일본해 중심론’, ‘일본해 호수화론’이 있다.

‘북조선 루트론’ 구상⁵⁾은 ‘간도(間島)’의 지리적·전략적 중요성에 기초하며 중국 동북부의 교통의 요충지인 지린(吉林)과 한반도 북부의 회령을 잇는 길회선(吉會線)의 부설과 관련된다. 이 루트는 ‘북한 3항(웅기, 나진, 청진)’ 및 한국 북부의 철도선을 경유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연결되는 경로로서 크게 발전한다. ‘일본해 중심론’이란 당시 해운업계 출신인 마쓰오 코사부로(松尾小三郎)에 의해 제안되었다. 현재 중조러(中朝露)의 국경을 나누는 두만강 경로의 잠재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 중국의 장춘(長春)에서 개최된 제 1회 동북아시아 경제발전국제회의에서의 두만강 개발구상과 그리고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과 매우

3) 일본의 환동해 구상의 역사적 변천사에 대해서는 와카쓰키 아키라의 논문(若月章 2003, 144-155)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4) 이 논문에서 정체성 관련 논의는 주로 Alexander Wendt(1999)의 논문을 참고 했으며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서의 지역정체성 관련 논의는 박한규(2010) 논문 참고 했다.

5) 이 구상의 제창자는 나카이 요시타로(中井喜太郎), 나이토우 코난(内藤湖南), 스즈키 타케오(鈴木武雄)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구상의 첫 단계는 쓰루가(敦賀)-청진-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동해 항로의 개발 및 무역진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송항로개발 루트 구상은 이후에 등장한 ‘일본해 중심론’이나 ‘일본해 호수화론’ 제창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유사하다. ‘일본해 호수화론’은 마쓰오카 마사오(松岡正男)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1931년 조우에쓰 선(上越線)의 개통, 만주사변의 촉발, 만주국의 수립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쓰오카의 구상 내용은 동해에 있어서의 일본의 권익 확보, 만주의 질서유지, 조선 북부·만주 북부의 적극적인 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동해 항로의 확보가 급무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구상들은 일본의 침략적 국가 정책인 대동아공영권⁶⁾구상으로 수렴되면서 결국 일본의 패전과 함께 완전히 좌절된다.

(2) 지역 자립형 개발구상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탈 냉전기까지의 시기에 제시되었다. 환동해 지역에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로크적 문화(Locken culture)의 수동적 집합 정체성(passive collective identity)이 형성된 시기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냉전구도가 환동해 지역에 침여하게 형성되면서 동해는 ‘단절, 대립, 긴장의 바다’가 되었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에 대한 새로운 구상의 모색은 냉전구도가 느슨해지는 1955~65년이 되고 나서 재개되었다. 1956년 일소(日蘇) 수교,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조인 등으로 동해 연안지방자치체, 경제계, 문화계의 다각적인 교류 구상이 움트게 되었다. 특히 환경문제 대두, 일본의 대미 의존외교에 대한 논쟁으로 새로운 개념의 구상들이 등장했다.

월간지 『코리아 평론』(1968)에 게재된 후쿠시마 마사미쓰(福島正光)의 논문 「환일본해 경제권의 제창-평화와 번영의 제 3의 길」이 그것이다. 그 골자는 동해를 둘러싼 냉전 환경에 입각하여 새로운 환동해 경제권을 확립함과 동시에 소련, 중국, 남북한, 일본의 환동해 연안지대의 지역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상호 시민·문화 교류가 최종적으로 환동해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상이다. 그 저변에는 전후 일본이 선택했던 과도한 대미 의존이나 태평양 중시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었다. 무엇보다도 도쿄 중심의 발상이 아니라 ‘지방’의 주체성에 역점을 둔 참신한 구상으로 당시의 지방정치가의 관심을 불러왔다. 이후 이 구상은 『일본해 시대』(마이니치신문사)⁷⁾와 『내일의 일본해-개발의 구상』(신시대사(新時代社))⁸⁾, 『환일본해 구상과 지역개발』(일본경제신문사)⁹⁾과 같은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

이 구상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내용을 담고 있다. 대미의존으로부터 탈각과 새로운 대안 지향, 환동해 연안지역의 후진성 극복, 자연과 조화된 지역개발과 환경 보전, 태평양 지향과는 다른 동해 정체성의 모색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전후 구상은 냉전에 의한 대립과

6) 대동아 공영권은 아시아·태평양 전쟁기에 만들어진 일본을 맹주로 하는 세력권이다. 1940년 당시의 외상 마쓰오카 요구스케(松岡洋右)가 일본의 외교방침으로써 제창하였으며, 일본을 중심으로 만주·중국·동남아시아·남양지역을 그 지리적 범위에 포함한다. 이 구상은 아시아 해방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식민지 건설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획득을 목표로 삼았다.

7) 『일본해시대』는 동해 측의 산업분석, 무역이나 교통 네트워크 등이 주된 내용으로 동해 측의 후진성의 탈각, 자연과 조화된 사회기반 만들기 그리고 환동해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을 소개하고 있다.

8) 『내일의 일본해』는 탈 이데올로기적 착상을 기조로 기존의 ‘일본해’·‘우라니혼(裏日本)’에 대한 이미지, 혹은 당시 국제환경의 제약에서 탈피하여 환동해 지역의 여러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미래개발구상이다.

9) 『환일본해 구상과 지역개발』은 동해지역에 있어서의 자연환경적 조건, 사회경제적 조건, 생활·문화·산업, 지역 문제를 통찰한 환동해 구상으로, 전후 최초의 본격적인 학술논문을 집대성하고 있다.

긴장구도로 규정된 환동해 지역의 현실을 전제로 평화지향·지역자립형의 ‘공생’이나 보다 더 한층 적극적인 ‘협생(live and let live)’¹⁰⁾을 정착시키려는 발상의 출발점이 되었다.

(3) 탈냉전 이후 환동해 지역 내 상호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이 시도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칸트적 문화(Kantian culture)가 자리 잡으면서 긍정적 집합정체성(positive collective identity)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상호 협력을 통해 절대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지역적 이익이 자신의 이익에 필수 요건임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다. 냉전의 종료와 함께 환동해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구상이 공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소위 ‘구상론’의 단계에서 ‘구체론’의 단계로, ‘총론’수준에서 ‘각론’수준으로 그 성격이나 내용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환경, 공생이 핵심 주제인 가운데 지방차원에서 경제·안보·환경 협력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환동해 경제권’, ‘경제협력’, ‘공동개발’ 등과 같은 구상이 제시되었다. 이런 현상은 국가 단위뿐 아니라 지방, 지역 차원에서 경제적 협력이 보편화되면서 ‘지역경제권’¹¹⁾, ‘하위지역협력’¹²⁾구상이 진행되는 세계적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북아시아경제회의’, ‘동북아시아경제포럼’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아직 다자간 협력조직이나 체제가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두만강 지역개발, 에너지 공동개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과 같은 구상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둘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동북아시아 협조적 안전보장 구상’ 등은 학계뿐 아니라 지방자치체나 넓게는 시민 차원에서 본격화되어 왔다. 환동해의 안전 보장, 비핵화, 평화지방자치체 네트워크의 확립 등 안전보장 면에 있어서의 제안¹³⁾이 활발하다. 이는 공통된 인식은 냉전기로부터 오늘날까지 동북아시아를 규정하고 있는 동맹관계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력을 지향하고, 고도의 안전보장 협력을 재편성하려는 ‘동아시아의 평화구상’이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체나 NGO 등 국가 이외의 국제 행위자의 참가가 필수적이다.

오늘날 여전히 구상의 구체화가 현실에서 순조롭다고는 할 수 없다. 여전히 안보문제에서 세력 균형이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협력을 강하게 회구하면서도 환동해 지역 간 협력이 여전히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현재 환동해 지역에서 현실적인 측

10) 시부야 타케시(澁谷武)가 환동해의 ‘개발’이나 ‘교류’의 올바른 모습으로 ‘자아공정·타자공정’을 지향하는 이념으로서 ‘협생’의 철학을 제기했다.

11) 1990년대부터 세계경제의 로컬화 현상 즉 지역경제권(Local economic zones)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성장의 3각 지대’, ‘바트경제권(Baht Economy)’, ‘화남(華南)경제권’, ‘황해(黃海)경제권’ 등이 있다.

12) 하위지역협력(subregional cooperation)은 포스트 냉전시대의 국제질서 재편성의 일환으로서 형성된 지역협력을 말한다. EU나 아시아 태평양지역 등의 상위지역의 국가 간 협력의 내부에 지방끼리 국경을 초월해서 형성하고 있는 지방 간 협력을 의미한다. 단지 상위지역에 대해서 독립한 존재가 아니라 개방적 또는 상보적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점이 일반적이다.

13) 예를 들어, 1999년에 니가타에서 비핵자치체 회의가 열리는 등 지방 자치체 차원에서도 안전보장문제를 지역 고유 의 과제로서 논의하려 하였다. 1995년부터 매년 가네자와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연합 동북아시아 가네자와 심포지움’에서는 국제연합과 지방자치체가 직접 제휴하고, 각국에서 외교관, 국제기관, 관료, 연구자, 저널리스트, NGO 관계자가 참가하며 군축문제부터 사회개발, 환경, 안전보장 문제에까지 광범위한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면에서의 발전 정도가 인식적 측면이나 학문적 측면을 일정 정도 앞서나가고 있다.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의 상당한 수준의 교류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런 교류를 긍정적 지역 정체성 형성으로 유도하는 제도화 수준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는 여전히 이 지역의 실재를 기존의 근대적 패러다임으로 환원하여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동해 지역은 탈냉전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변화의 성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이론화 작업의 기본적 가정으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지역을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간의 물리적 조건이나 객관적인 조건도 결국 사회적으로 주관적 인식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은 지리적 관련성,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기초로 해서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성격 또한 계속 변화한다. 환동해 지역정체성 또한 마찬가지다. 지역 국가들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지역문화(regional culture)가 형성 된다. 이런 상호과정을 통해 특정 시대에 특정 지역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해체되어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지역문화가 창출되기도 한다.

Ⅲ. 현대 일본의 환동해 연구의 실재

1980년대에 탈냉전, 지구지역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동해’라는 공간 또한 점차 긴장과 대립의 장에서 협력으로 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 지방, 특히 환동해 지역의 지방들의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여러 ‘지역 간 협력’구상¹⁴⁾이 제시되었다. 지역 간 협력 구상에 주로 ‘경제협력’, ‘안보협력’, ‘환경협력’이 주 내용이다. 환동해 지역의 지방간 협력 구상은 지구지역화 시대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데 이미 유럽에서 ‘유러리전(Euroregion)’¹⁵⁾과 같은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환동해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에서는 새로운 학적 체계인 ‘일본해학’¹⁶⁾이

14) 동해를 둘러싼 일본 측의 지역 간 협력에는 홋카이도(北海島)의 ‘북방권 구상’, 가고시마(鹿兒島)·오кина와(沖縄)의 ‘남방권 구상’, 북부 규슈·야마구치 지역의 ‘환동해·황해 교류 구상’이 있다. 한편 환동북아시아 지방 간 협력 구상으로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1993)’, ‘환동해 거점도시회의(1994)’,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1994)’ 등이 있다.

15) 유러리전(Euroregion)은 유럽 각지의 지방에 의한 월경협력과 지역통합 시도를 가리킨다. 특히 환내해(環內海)협력으로서는 ‘환발트해 협력’, ‘환바렌츠(Barents)해 협력’, ‘흑해 경제협력’, ‘아드리아해 경제협력’, ‘환북해(環北海)지역 협력’, ‘지중해 경제협력’ 등이 있다(若月章 2003 참조). 1975년 결성된 유러리전 ‘Upper Rhine’은 라인강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접경지역의 월경적 상호협력이다(김부성 2006, 22-38 참조).

16) ‘일본해학’에 대해서 일본해학추진기구 홈페이지(<http://www.nihonkaigaku.org>)와 『일본해학의 신세기』 시리즈를 참고함.

정립되기 시작했다. 일본해학 추진기구(Japan Seaology Promotion Organization)¹⁷⁾가 창설되고, 환일본해학회(현 동북아시아학회)가 창립되면서 환동해 지역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일본해추진기구는 ‘일본해학’ 구상을 제창하고, 지속적인 학술회의 개최¹⁸⁾, 단행본 간행¹⁹⁾, 일반강좌 개설²⁰⁾, 대학 강좌 개설²¹⁾, 관련연구 기관과 연대²²⁾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일본의 환동해 지역연구를 체계화시키고 있다.

일본해학 추진기구에서 출판된 『일본해학의 신세기』에 의하면 ‘일본해학’은 학적 체계로서 종합학²³⁾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10년도 개설된 일본해학 추진기구 홈페이지에서는 ‘일본해학’이 종합적 학문임과 동시에 실천학문²⁴⁾임을 선언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해학의 신세기 시리

- 17) ‘일본해학추진회의’는 1994년 창설되어 이후 ‘일본해학추진기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재단법인 도야마 국제센터 안에 ‘일본해학추진기구’를 두고 ‘일본해학’을 지원하고 있다.
- 18)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바다와 물고기와 우리들」(2009), 「숲, 바다, 생명 행위에서 배운다」(2008), 「벼에서 발견하는 환일본해인·풍토·환경」(2007), 「바다에서 바라본 연결된 환경-바다, 마을, 산, 하늘」(2006), 「바다와의 공생」(2005), 「환일본해 지역·지속 가능 사회에의 진명」(2004), 「일본해의 평화」(2003), 「진화하는 일본해학」(2003), 「환일본해 문명-숲의 문명 패러다임」(2002), 「신세기, 오사카에서 바라본 문명과 바다」(2001), 「지금, 도야마에서 일본해 르네상스의 태동」(2000) 등.
- 19) 『환일본해제국도』(1994)의 출판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서가 출판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간행된 일본해학의 신세기 시리즈는 일본해학에 대한 종합연구서이다. 『일본해학의 신세기』(1권), 『환류하는 문화와 미』(2권), 『순환하는 바다와 숲』(3권), 『위기와 공생』(4권), 『교류의 바다』(5권), 『바다의 힘』(6권), 『연결된 환경: 바다·마을·산』(7권), 『일본해: 과거에서 미래로』(8권)가 그것이다. 기타 『조몬시대의 생산과 교류』, 『근세 중후기, 카에쓰노 운송선과 일본해 지역의 해운』, 『해역 세계 중 일본해 연안지역』, 『눈과 인간』, 『환일본해 지역의 식생과 기후 온난화의 영향』, 『일본해와 일본』, 『일본해 또는 그 주변지역의 암석』, 『일본해의 성립과 그 환경변천』, 『환일본해 문화를 북방 민족학에서 바라본다』, 『배에서 본 일본해 문화』, 『일본해 연안지역에 걸친 민속 문화』, 『일본해/동아시아의 지중해』, 『일본해와 환일본해 지역 -그 성립과 자연환경의 변천』, 『산악신앙과 일본인』, 『자연과 경제에서 바라본 동북아시아의 환경』 등 연구서가 출판되었다.
- 20) 「순회하는 물, 연결된 물」, 「바다의 은혜와 이름난 물의 거리」, 「고사기·풍토기에서 보는 일본 문화」, 「환일본해 경제교류는 얼마나 변화해 왔는가?」, 「일본해가 가져온 눈과 식물의 다양성」, 「일본해를 넘어선 대기오염과 황사」, 「산·강·바다의 연결과 물고기들」, 「자연환경의 보전과 하천 만들기」, 「언어로 보는 일본해지역」, 「도야마만의 어류들」, 「숲과 물의 순환」, 「바다의 민속학」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였다.
- 21) 대학과 연대하여 「지역환경론」, 「지역학개설-종합학문으로서의 일본해학」, 「일본해학」, 「환경·자원·생물-일본해학의 시점으로부터」, 「경영사례연구-일본해학의 구축을 둘러싸고」, 「일본해학-일본해 지역의 문화·자연·환경」, 「일본해학-문화를 잇는 일본해」 등과 같은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 22) 「일본해를 과학한다」(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연대), 「신선한 도야마만 연구의 최전선에서」(일본해양학회 연대), 「눈과 사람: 일상생활을 지지하는 일본해」(종합지구환경학 연구소), 「일본해 지역과 기후변화」(기상청 연대), 「만세의 시대와 국제환경(국립민속학박물관 연대), 「환일본해의 환경보전」(동북아시아 교류 프로젝트) 등.
- 23) “‘일본해학’은 환일본해 지역 전체를 일본해를 공유하는 하나로 통합된 권역으로 파악하여, 일본해에 초점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환일본해 지역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 지역 간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종합학으로서 학제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다.”(日本海學推進會議編, 2001)
- 24) “‘일본해학’은 일본해와 그 주변 및 관련 지역 전체를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파악하여, 바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연·문화·역사·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해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구상하는 작업임

즈(2001)에 따르면 일본해학 제창의 필요성으로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 대한 이해이다. 그리고 일본해와 관련지역 전체를, 바다와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으로 파악하여 관련성을 축으로 자연·문화·역사·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행복한 미래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지구규모의 과제에 대처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해학의 기본적인 관점²⁵⁾은 순환(Circulation), 공생(Symbiosis), 일본해(Japan Sea)로 하고 있다. ‘순환’은 환동해 지역이 주기성을 가진 지구전체의 자연환경 시스템 안에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전체의 순환 시스템 속에서의 자연과 인간을 고찰하고, 생명과 인간의 역할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폭발, 지구온난화, 삼림파괴, 환경오염 등의 글로벌한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공생’은 환동해 지역에 있어서의 인간과 자연 간, 인간과 인간 간 관계를 보는 시각이다. 일본열도와 대륙이 각각 연결되어 동아시아가 동해를 끼고 하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동해 및 환동해 지역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시공간적 특성을 대립보다는 공생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이는 환동해의 정치형태의 차이, 경제의 발전단계의 차이뿐 아니라 종교, 민족,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양적 관점으로 긍정적 지역 정체성을 지향한다. 다음은 동해의 역할과 의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동해는 대륙의 주변에 생성된 연해(marginal sea)이자 소해양이다. 태평양이나 인도양과 같은 대해가 아니기 때문에 항해술이나 조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기 전부터 주변국의 여러 민족이 바다를 통한 교류를 형성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교류의 역사, 문화를 이해한다.

일본해학의 연구분야는 ‘환동해 자연환경’, ‘환동해의 교류’, ‘환동해의 문화’, ‘환동해의 위기와 공생’ 등 4개로 구성되어 있다.

환동해의 자연환경 분야에서 동해와 환동해 지역의 자연 환경적 특성과 변화를 다루고 있다. 동해의 형성과정 및 생태시스템의 주기성, 동해의 기후, 해류, 해수면 상승 등의 환경변화, 동해의 순환, 동해의 생물사 등이 연구 주제이다.

환동해의 교류 분야는 환동해 지역의 교류 요인 및 형태를 다루고 있다. 사람과 문물의 교류 요인을 자연환경(기상, 해류, 해진, 지질, 식생 등)적 측면 및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하게 된다. 교류 형태연구에서는 동해를 매개로 한 교역을 상호적 관점에서 파악함과 동시에, 남중국해-동중국해-동해-호호츠크해라는 세계적 규모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환동해 문화 분야는 민족이 환동해의 자연환경이나 교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내고 이어 받은 생활문화(바다환경에 적응하는 문화, 동해를 사이에 두고 공유해 온 장식품, 복식품, 공예품, 미술품, 바다를 잇는 바다와 항구 등)의 특성이나 동해와의 연관성 속에서 생겨난 바다의 사상이나 신앙(환동해 지역에서 생긴, 동해를 사이에 두고 공유한 공존, 순환, 적응, 두려움, 공존, 분배, 평화, 환경사상 등 현대에 이어지는 사상 등)을 연구한다.

환동해의 위기와 공생분야는 동해의 환경을 둘러싼 위기(환경 호르몬이나 해양오염물질, 산업

니다.” 2010년도 개설된 일본해학추진기구 홈페이지 <http://www.nihonkaigaku.org>(검색일, 2011. 8. 2).
25) ‘Japan Seaology’ Proposal(From Toyama to the World).<http://www.nihonkaigaku.org>(검색일, 2011.1.7).

폐기물과 이산화탄소 증가, 이상기상의 발생, 해저지진, 지진재해, 산성눈과 산성비, 멸종 위기종, 대기오염, 등)와 동해의 환경보전을 위한 방책이나 국제협력, 미래의 환동해 지역 교류의 가능성을 조사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오염 제거, 침식 방지, 수질 개선, 심층수개발, 해저자원개발 등), 환동해 지역의 공생(환동해 지역 모든 국가의 정치경제 안정화로 연결되는 해안지역의 개발·무역·투자, 환경오염, 폐기물 투기 등의 마이너스 경제의 발생을 억제·해결, 안정된 교류를 만들기 위한 협정, 외교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상의 네 분야는 상호 연계성 속에서 학제적으로 연구된다. ‘일본해학’에서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의 환경적 위험에 대처하는 연구와 그 실천이다. 그러나 환동해학은 동해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충하는 관점에서 사용가치를 우위에 둔 동해 인식이 압도적이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는 ‘일본해학’에서 생태적 사유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래의 경제가치 증대와 낙후지역인 동해 연안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의 결과임을 여실히 보여준다(이선이 2011). 실제로 일본해학추진기구에서 제시한 생태적 사유를 담고 있는 담론적 실천을 보면²⁶⁾ 동해를 자원의 보고로 인식하거나 학적으로 규명할 탐구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은 전체 논의에서 부수적 의미 밖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구상적 차원에서의 담론과 실천적 차원에서의 논의 사이에는 상당한 균열과 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IV. 일본의 환동해 연구의 특성과 한계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환동해에 대한 관심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일본해학’이 대표적인 환동해 연구로 자리 잡았다. 냉전이 끝나고 이데올로기에 대체되는 새로운 가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즉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형태로 개발하는 탈근대적 논리를 반영함과 동시에, 서구의 근대성의 대안으로 제시된 동아시아 담론들과 궤를 같이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환동해 지역의 경제적, 자원적 협력과 같은 협력논리, 미국 일본도 동맹외교 탈피, 중국의 견제와 같은 민족주의 논리²⁷⁾ 그리고 낙후된 환동해 지방의 개발이나 해양자원의 개발이라는 성장주

26) 대표적인 논의로는 「환일본해 구상의 역사적 변천: 개발 우선형에서 환경 공생형 구상으로」, 「일본해의 성립과 해류의 맥동」, 「바다를 건너는 황사와 산성비」, 「환일본해의 가능성」, 「신세기에 요구되는 지역학: 인간중심주의에서 자연과의 공생으로」, 「순환체계로서의 환일본해학」, 「설빙학의 측면에서 본 환일본해 물 순환」, 「환일본해 환경공생의 농업」, 「일본해 자원의 길」, 「환일본 지역 지속가능사회로의 전망」, 「바다와 마을을 잇는 일본해의 ‘里海論」 등을 꼽을 수 있다.

27) 코우사카 마사타카(高坂正堯)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섬나라근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은 섬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해양국가다. 우리는 언제나 섬나라라는 방어적인 피해자적 의식을 가지고 약한 나라다, 작은 나라라고 과잉반응을 해서 실패를 한다. 해양국가라고 굳게 다짐해야 한다”고 관점의 전환을 시도했다(大塚和義, 小泉格, 丹羽昇 編 2005, 116-117). 심지어 일본해학은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해외를 향하여 발신할 수 있는 학문이고, 일본해학은 사명적인 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川勝平太 2004). 이렇듯 ‘환일본해학’에서 여전히 인식론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논리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근대적 논리와 탈근대적 논리를 병합시킬 수 있는 인식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학적 체계화가 시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해학은 ‘기획’의 속성이 강하다. 어떤 의미로 ‘새로운 실학’이다. 일본에서 서양 학문은 근대문명을 형성하는데 유용한 학문, 즉 실학으로 수용되었다. 서양학문이 지적체계로서 토착화된 것처럼 근대문명의 한계선에서 지역에 입각한 새로운 학문으로 일본해학이 설정되고 있다. 일본해학은 세계적 차원의 지역주의 대두, 환경보존이라는 시대적 요구, 지방적 차원의 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환동해의 지역 정체성을 상호관계성으로 설정하고 국제성, 지방성을 포괄하면서 초국가적, 다차원적 경계의 존재를 수용하고 있다.

환동해 지역성은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양한 문명이 교류하면서 형성되어왔다. 하지만 바다 문명교류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 문명교류 중심으로 인류문명을 설명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해학은 일본열도와 관련한 동해 문명교류권, 동중국해 문명교류권, 태평양 문명교류권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문화와 역사가 바다의 교류를 통해서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육지에 시점을 둔 역사관이나 문명관을 비판하면서 ‘일본사의 쇠국’에 대해 반성을 주장하고 있다(講談會 2001, 31-32).

다음은 지방의 중앙으로부터 해방이다. 오늘날 환동해 연구에서 주요 행위체는 현(縣)이나 주(州)레벨의 지방 자치단체이다. ‘환일본해’ 구상은 초기 니가타현·도야마현 등 동해 연안 각 지역²⁸⁾으로부터 출발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한국의 강원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환동해 구상이 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지방의 개발문제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지역화가 주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문제의 지역화를 위해 중앙으로부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앞의 책, 50-51).

지역연구는 ‘어떤 지역을 왜 연구하는가?’라는 규범적 차원(normative level)의 질문에서 출발하게 된다(권세은 2010, 25). 일본의 환동해 지역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관심에서 환동해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는 종종 정책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띠며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정책적, 실용적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하여 학문이 반드시 정책적인 측면으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일본해학’은 환동해 지역 및 동해를 하나의 순환 및 공생체계로서 파악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지역 및 지구의 자연환경과 인간 사이의 연관성, 지역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관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순환 및 공생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장래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측하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여 지역 전체의 위험을 피하고, 나아가서는 건전한 지역 및 지구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시대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동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환동해의 실재를 어떻게 접근(설명, 이해)할 것인가라는 인식론적 차원(epistemological level)의 논의가 일본의 환동해 연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으로 간주된다. 일본해학은 공

28) 니가타현의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도야마현의 ‘동북아시아자치연합(NEAR)’, 교토부의 ‘환일본해 아카데미 포럼’ 등이 환동해 교류권의 거점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생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직선적 발전의 문명관에서 순환적인 문명관으로의 전환, 국가중심 사고 방식에서 지역중심의 사고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인식패러다임을 전환을 의미한다. 지구지역학(glocalogy)으로서 일본해학은 시대적 보편성과 환동해 지역의 특수성을 결합시키고 정치경제 중심의 지역연구를 넘어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환동해 지역을 인식하고 논의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생태화와 근대화, 중앙과 지방, 국가주의와 지역주의 등과 같은 논리가 중첩되면서 일본해학이 스스로 제시한 ‘순환’과 ‘공생’의 관점을 벗어나고 있다.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환동해라는 장소를 중시하고,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환동해 연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이 근대극복 과제와 근대적응 과제를 동시에 해석하고, 중첩된 지역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이다. 여기서 국가 및 민족,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는 환동해 연구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수성, 구체성을 보편적으로 분해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국경, 민족, 이데올로기에 갇힌 시각을 넘어 환동해 지역 전체 차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대안적 인식 패러다임이 절실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 인간과 사회의 역동적인 상호과정을 전체로서 규명하고 통합적인 대안을 모색했던 종합학문으로서 일본해학은 상당 부분 근대 패러다임에 기대고 있어 새로운 ‘환동해학’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데카르트-뉴턴적인 근대 패러다임에서 전일적이고 비선형적인 체계의 장발성을 강조하는 복잡성 패러다임으로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자국이기주의, 발전주의, 국가환원주의, 경제 환원주의와 같은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관계성, 복잡성, 생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오늘날 근대화, 산업화 패러다임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패러다임이 생태주의 패러다임²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담론과 지역담론의 결합에 환동해 연구가 위치할 경우 복잡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과정으로 구성되고 있는 공간의 지구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의 중층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근대 패러다임에서는 지역의 정치경제적 실재를 해석하는 논리가 실제에 기초하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정치 프레임 속에서 현실을 해석하여 지역의 식민지화, 개발지상주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생태위기에 대한 반성이 현대성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발전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면서 환동해 지역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적, 민족적, 성장 중심적 사회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9) 생태 패러다임은 자연-사회-주체성의 문제를 자기조직화 체계로 파악(생태론)하고 자연-사회-인간생태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해명(생태학)하고 생태적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운동(생태주의)으로 발전하고 있다.

V. 결 론

2011년 8월 동해표기와 독도영유권 관련 뉴스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제 잔재를 복원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환동해 지역의 중층적 지역성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다. 동시에 극복해야 할 근대성, 완성해야 할 근대성이 공존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경하던 동해라는 용어가 이제 널리 회자되면서 그 존재와 관심이 사회적으로 점차 통념화되고 있다. 일본의 ‘일본해학’에 대응하는 대항적 차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규범적 측면에서 환동해 연구가 현실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환동해라는 지역단위는 지역연구에서 실천적 의미를 충분히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환동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환동해는 여전히 변방지역으로 인식되고, 지방개발 차원에서 주로 논의가 되면서 종합적인 동해연구는 답보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환동해 지역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관련국 간 학문적 교류는 환동해 연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환동해 공간은 지구지역화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생, 협력의 가치가 국가, 민족, 자본 포섭될 경우, 환동해의 연구는 탈근대적 패러다임에 기댄 또 다른 근대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일본의 ‘일본해 구상’ 및 ‘일본해 연구’는 시대적, 사회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환동해 지역의 실재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서 관계론적 패러다임보다는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기반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고 적응하여 구성되는 세계 즉 환동해 지역의 실재에 대한 해석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환동해에 대한 연구는 지역(local)에서 전지구(global)까지, 미시(micro)에서 거시(macro)까지 전체를 하나로 결합하고 사고하는 글로컬리즘(glocalism)을 분석하는 일종의 지구지역학이다. 현 시점에서 환동해 연구는 근대적 지역인식 체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지역인식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즉 현대라는 시대성과 환동해라는 공간성에 대한 규명이다. 공간적으로 ‘환동해 지역’은 실재하는 구체적인 공간 및 장(場)이면서 동시에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의 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성을 어떻게 정의하는 연구자들은 환동해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만 가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환동해를 물리적·절대적 공간 안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이고 상대적인 공간 속에서 개념화하고, 재현 및 실천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이해할 경우, 연구는 환동해 공간의 개념적 그리고 현실적 변화과정, 그 변화과정의 메커니즘과 지역의 다층적이고 다성(多聲)적인 관계를 해석하게 된다. 환동해 지역성에 대한 논의는 기존 동아시아 지역성 논의의 한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정체성은 고정적이고 일원적이거나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외부와의 소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원적이고 복수적인 관계성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성 또한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창발적 공간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국 환동해 지역 연구는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출발할 경우 중층적이고 다위계적인 지역정체성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환동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참 고 문 헌

- 권세은(2010). “지역연구 대상으로서 환동해 지역의 설정.” 『아태연구』. 제17권. 제2호.
- 김부성(2006). “독일·프랑스·스위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 상호작용.”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1호.
- 박한규(2010).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성주의적 접근.”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 이상헌·정태석(2010). “생태담론의 지역화와 지역담론의 생태화.” 『공간과 사회』. 제33집.
- 이선이(2011). “방법으로서의 생태적 사유와 공생의 전략.”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환동해 국내학술회의 발표문.
- 최승업(2002). “환동해경제권 관련 한일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보고 02-03.” 강원 발전연구원.
- “中, 北 나선항 이용권 첫 행사.” 『조선일보』. 2010. 1.4.
- Alexander Wendt(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講談會(2001). “日本海學の新世紀.” 『日本海學の新世紀』. 角川書店.
- 大塚和義, 小泉格, 丹羽昇 編(2005). 『日本海學の新世紀⑤: 交流の海』. 角川書店.
- 小泉 格, 清家彰敏 編(2004). 『日本海學の新世紀④: 危機と共生』. 角川書店..
- 小泉格 編(2003). 『日本海學の新世紀③: 循環する海と森』. 角川書店.
- 若月章(2003). 「環日本海構想の歴史的変遷—‘開發優先’型から‘環境共生’型構想へ」. 『日本海學の新世紀③』. 角川書店.
- 日本海學推進グループ(富山縣企畫部 日本海政策課), 「日本海學の提唱とその意義」, 日本海學推進會議編(2001). 『日本海學の新世紀』 角川書店.
- 日本海學推進機構 編(2007). 『日本海學の新世紀⑦: つながる環境 海・里・山』. 角川學芸出版.
- 日本海學推進機構 編(2008). 『日本海學の新世紀⑧ 總集: 日本海·過去からへ未來』. 角川學芸出版.
- 川勝平太(2004). “日本海學と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 『日本海學の新世紀④』. 角川書店.
- 青柳正規, ロナルド・トビ 編(2002). 『日本海學の新世紀②: 還流する文化と美』. 角川書店.
- 蒲生俊敬, 竹内章 編(2006). 『日本海學の新世紀⑥: 海の力』. 角川書店.
- 일본해학추진기구 홈페이지 <http://www.nihonkaigaku.org>(2011년 8월 2일 검색).

Abstract

Critical Review of the East-Sea Rim Studies and Research Design in Japan

Kwon, Se Eun*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ew academic research focusing on “East Sea Studies” and “Japan Seaology” in Japan. There ar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East Sea Rim region as an research agenda: the region of four countries (North and South Korea, Russia, China, and Japan)’s interests conflicting area, historical complicated region reflecting of contradiction between modernity and post-modernity, and the Cold War and post Cold War period, furthermore, the space of reality in which each country has implemented its own public policies based on regional situation in terms of political geology and political economy.

No matter that there is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four countries and whether scholars focus on studying about 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or not, this East Sea Rim region should be considered as an significant area being worthy to be studied in the systemic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s. The high level of public concern about East Sea Region has provoked to the necessity of studying the region a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t has been recognized in the field of regional studies that, for the sake of searching a new research paradigm for East Sea Regional Studies, reviewing the previous related studies such as Japanese East-Sea Rim studies and research designs can be considered as a prerequisite for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 in this academic field.

The main feature of Japanese regional studies relating to East-Sea Rim area, Japanese scholars are tend to focus on more practical policy issues such as the issues of dynamic relations rooted in the problems of modern and post modern society. It is appropriate time to search out new research paradigm in the field of regional studies which would help us recognize the nature and reality of East Sea Region.

■ 논문 투고일 : 2011년 7월29일, 논문심사일 : 2011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1년 8월 24일

* Professor, Department of Russian, Kyung Hee University